전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지혜 모아

제도 시행 1년 경과 분석ㆍ개선사항 등 논의… 제도 활성화 위해 민관 소통ㆍ역량 강화키로

전북도는 25일 '전라북도 총괄·공 공건축가' 제도의 추진사항을 전반적 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정 전북도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공공건축가 20여 명이참석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심도있는 전문가 자문이 가능 하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적용사업 범위를 기존 도내 전 시·군에서 전북 도 직접 발주사업으로 조정한다.

이에, 공공건축가와 추진사업간 1:1 연결이 가능해 실질적인 민관 협력체 제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울러, 공공건축가와 사업부서와의 '사전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완성도 있는 시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에서다. 또한, 지문 대상・범위・기준 등 공



전북도는 25일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공건축가 제도 운영의 전반적 내용을 담은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운영 규정을 제정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관 소통과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화상회의, 서 면회의 등 비대면 회의방식을 탄력적 으로 활용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 할 계획이다.

또, 격월 주제별 세미나 발표 및 외 부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 워크숍 계획을 수립해 공공건 축가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진정 전북도 총괄건축가는 "총괄· 공공건축가 제도가 성공적인 민관 협 력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 정과 건축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고 말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제도 시행 1년을 냉철하게 분석해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한 민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속도감있게 마련하겠다"며 "전북도만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멋스러운 도시공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소형 돌고래 '상괭이' 보호장치 마련

전북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사업 추진

전북도가 상괭이가 가장 많이 혼 획되는 안강망 어구에 상괭이 탈 출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해양포 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사업(이 하 보급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안강망 어구에 상괭이 탈출장치(탈출망+설치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어업 인의 별도 부담은 없다.

'혼회(混獲)'이란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다.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일을 말한다. '혼획 저감장치'는 의도치 않게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빠 져나가게 하는 장치로 상괭이를 탈출구로 이끄는 유도망과 상괭이 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탈출구로 구성돼 있다.

지원 대상은 근해안강망, 연안개 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혼획 저감 어구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 인으로, 도내 112척의 어선이 상괭 이 보호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웃는 돌고래'라 불리는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의 소형 돌고래로, 대한민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그 중 우리나라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 등으로 지난 2004년 3만 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 여 마리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이에 해양포유류의 보호뿐만 아 니라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서 도 상괭이 탈출장치 보급이 꼭 필 요한 상황이었다. /유호상 기자

도 산림환경연구소, 미세먼지 저감 위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전북도 산립환경연구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전주 동완산동(완산공원)과 완주 대아수목 원 등 도내 60ha이상 규모로 '미세먼 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 한다. 이에, 총 사업비 1억6,270만 원 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는 목재생산이 목적인 일반 숲 가꾸기와 달리,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생활권 에 숲을 가꾸는 환경개선사업이다.

이에, 다양한 수종의 다층 혼효림으로 산림을 조성해 대기오염물질 흡수·흡착역할을 강화한다.

도는 가지치기와 수목 밀도를 조절하고 상층목과 하층목을 적정 관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열섬현상 완화, 경관관리 등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산립의 공익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적정 수준의 수목 밀도 조절을 통해 토양 유출과 산사태, 대형 산불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김용운 도 산립환경연구소장은 "산립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수 있는 숲을 가꿔나갈 것"이라며 "숲가꾸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수 있겠으나 공익사업임을 감안해 도민의 이해를 구하며, 최대한 단시간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내 건설업체 공사 수주액 전년 동기 14.3% 증가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도 도내 건설 업체의 공사 수주는 꾸준히 증가했다 고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도내 건설업체 공사 수 주액은 2,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469억 원에서 351억 원인 14.3%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가 증가한 것은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 등 지역건설 활성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시책의 발굴 과 추진에 기인한 바가 크다.

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새만금 사업의 지역 건설사 참 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 께 지난 2018년 6월 '새만금 사업 지 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해 개정 전 15%이던 지역업체 수주율이 개정 후 36%로 크게 증대됐다.

또한, 도는 하도급지원팀을 꾸려,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시를 위 해 건설협회와 시·군 및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대형시업장 등을 방문, 지역 건설사 수주 활동을 지원했다.

지난 5월까지 전북도가 방문한 횟수는 총 52회(유관 기관 19회, 시·군 15회, 대형사업장 18회)에 달한다.

도는 건설협회와 함께 대형 공시현 장을 방문해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와 지역 자재·장비·인력 활용을 적극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 공동주택 현장에는 도와 시·군, 전문건설협회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시공사 본사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전 북도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 일환으로 시·군, 유관기관 방문, 시공사 본사와 공사 현장방문을 지속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건설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중심의 적 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오염 토양 적정 관리 위한 도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일제점검 추진

전북도가 도내 토양 관련 전문기관 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오 염 토양의 적정 관리를 도모한다.

도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조사기관 8개소, 누출검사기관 1개소, 토양정화업 3개소 등 총 12 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 검사기관의 경우,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 여부, 장비의 정도관리 및 점·교정 이행 여부,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점검한다.

토앙정화업의 경우는 토양정화업 등 록증 대여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 무를 겸하는지의 여부, 토양정화공사 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정화업 자의 오염토양정화 관련 시항 등에 대 하여 업종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토양 분석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도는 일제 점검결과 위반기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맞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전주시, 공동 대응방안 마련 협력키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시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대 응방안 마련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25 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 전주시 주요 측정도로 협의, ▲도로청소 상호 협업 구축, ▲도로재비산먼지 측정 자료 공유, ▲효과적인 도로재비산먼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재비 산먼지 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설정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정밀 측 정차량을 이용, 오염상태를 실시간 측 정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도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상호 협 력 체계를 구축, 도로재비산먼지를 효 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서비스를 마 련할 예정이다.

유택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전 주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도로재비산 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도로청소 차 운행으로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 해 전주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